

[미디어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담에 ‘총선 악영향’ 전망한 외신들 “우파 언론조차 비판”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쓴 외신들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뜻
주목도가 높은 뉴스라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 높아
초대 자체가 스캔들 연루된다고 판단
‘Dior bag scandal’
‘추문’에 가까운 표현
수사도 안하고 비리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확정적으로 쓰고 있는 외신
보도 태도: 저것만 가지고 쓰지 않아.
전체 의혹들 (고속도로 스캔들 등) 다루면서
정권의 성격, 본질, 민주주의까지 다 다룸.
‘촛불’이후 세계 주목&부각 받은 한국
한국사회 민주주의 추락까지.
작성 과정: 특파원+스트링어
대개의 경우 한국이 주요 뉴스 생산지라서
도쿄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국 옮겨왔음
보도태도, 한국 이미지 볼 수 있음
뉴스 이면 볼 줄 알아야 해

지난 8일 영국 로이터통신은 “국민 대다수가 영부인의 사과와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권 보수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영부인에게 반성의 뜻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방송사 KBS와의 이번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그의 아내가 가족과 인연이 있는 목사를 ‘냉정하게 잘라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라고만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AP 통신과 이를 인용한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사 NPR 등도 유사한 보도를 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경우 “한국 언론이 이른바 ‘디올백 스캔들’로 부르는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첫 발언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야당을 화나게 했다”고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영문판(닛케이 아시아)은 윤 대통령 대담에 비판적인 한국 언론계 반응을 상세히 소개했다. “통상 윤 대통령의 보수정당을 옹호하는 우파 언론들조차 그가 이 사건 관련 질문에 대처한 방식을 비판했다”며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비판적 보도를 전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김 여사에게 접근한 목사가 ‘몰래카메라’로 그를 촬영한 것을 비판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신문은 또 “윤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면서 언론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그는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처음이자 여전히 유일한 기자회견을 주재했다. 그는 또한 아침마다 그가 서울의 집무실에 도착할 때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격식 없는 출근길 문답을 했다”며 “그는 윤 대통령이 뉴욕 순방했을 때 발생한 사건으로 MBC와 갈등 중이던 2022년 말

에 이런 교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디올백 스캔들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이라면서 “야당은 오랜 시간 그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고 비판해왔다. 이달 초 윤 대통령은 그 의혹에 대해 아내를 수사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이 김씨 일가가 소유한 땅값을 올려 금전적 이익을 얻게 할 수 있다는 의혹에 따라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CNN은 9일 “영부인은 논란은 낫설지 않다. 지난 몇년간 그는 이력 위조에 대해 사과했고, 논문 표절, 주가 조작 등 여러 의혹에 직면해왔다”면서 “김 여사는 후자의 두 개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그가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부인했다”고 했다.

CNN은 또 “김 여사를 둘러싼 최근의 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윤 대통령과 한국 여당에게는 본격적인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7일 블룸버그통신도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진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면서 “한국 대통령들은 5년 단임제를 수행하는데 4월 선거를 통해 윤 대통령이 자신의 어젠다를 밀어붙일 수 있을지 남은 임기 3년 교착 상태에 가로막힐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출산 기사 넘칠수록 저출산 오해가 더 쌓인다

저출산 관련된 기사는 거의 매일 언론에 나온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가장 부족한 것은 깨끗한 물이라고 한다. 저출산 관련 기사가 넘칠수록 오히려 저출산 관련 오해가 더 쌓인다. 저출산 관련된 대표적 신화와 진실을 따져보자.

첫째, 우리나라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많이 쓴다? 언론에서 저출산 예산을 꾸미는 수식어는 ‘천문학’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에 썼다며, 무려 380조 원을 썼다는 기사는 종종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예산은 OECD 선진국 대비 많지 않다. 일단 저출산 예산 380조 원의 정체를 알아보자.

이는 지난 2021년 감사원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감사결과’에서 나온 숫자다.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액을 의미한다.

시간은 흘러 지금은 2024년이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의 시계는 380조 원에서 멈춰있다. 2023년에도 50조 원은 지출되었다. 2023년까지는 520조 원이 훌쩍 넘는다. 매년 발표되는 저출산 예산을 단순 합산하여 업데이트하는 정도의 성실함이 아쉽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15년간 숫자를 더할 것이 아니라 18년간 숫자를 더하는 것이 더 좋겠다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다른 OECD 선진국대비 그리 크지 않다. OECD가 제공하는 통계에 가족지원(family benefit) 분야가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생기기 직전인 2005년까지는 GDP 대비 0.2%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가족지원 관련 지출액에 크게 못미친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가족지원 분야에 우리나라는 GDP 대비 1.4%를 쓴다. 그러나 OECD 국가는 평균 GDP 대비 2.1%를 지출한다.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로 칭송받는 프랑스는 가족지원 예산에 GDP 대비 2.7%를 쓴다. 결국 우리나라가 저출산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쓰는데도 출산율이 늘지 않는다는 많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둘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출산 예산을 효과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저출산관련 예산을 지출해도 출산율은 늘지는커녕 오히려 줄어 들고 있다. 380조 원이든 520조 원이든 돈을 썼는데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반성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도 실패를 인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전환했다.

그런데 그 전환된 정책은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만들자’가 아니다. 제1차, 제2차 저출산 정책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고자 했다면 제3차, 제4차 저출산 정책은 오히려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보다는 저출산 문제는 “사회, 경제, 구조, 가치관의 총체적 결과로써의 근본적이고 사회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을 노동력, 생산력의 관점에 기반한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다. 인간은, 그리고 여성은 국가가 돈을 준다고 바로 애를 낳는 존재가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나대봐도 내가 결혼하나 고양이랑 살지”라는 말이 이를 잘 대변한다. 그 결과 제4차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에서 간접적인 사회 분위기 개선 대응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아직 우리나라 언론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성범죄 방지가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범죄 방지 뿐만아니라 인권 증진을 위한 간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저출산 사회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성인지 예산 30조 원의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를 위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말이다.

마찬가지로 저출산 예산 520조 원은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예산이 아니다.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부족한 군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무기현대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무기를 현대화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방지해야 하고 무기는 현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인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전체 예산을 집계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저출산 예산에는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높이기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전체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인지하기 위한 예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출산 예산금액을 태어난 아이수로 나누어서 1인당 1억 원이 넘는다는 자극적인 기사는 지양해야 한다.

‘한동훈 연탄 검댕’ 정치권 공방 이슈가 가린 것은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본질은 정치인들이 설과 같은 명절이 되면 ‘가난’에 도움을 주는 서민 친화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연탄 나르기와 같은 봉사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탄 검댕과 같은 정치권 공방은 정치권의 ‘가난 활용법’에 대한 고민을 은폐시킨다.

한동훈 위원장이 봉사활동을 했던 백사마을을 다음날 찾은 오마이뉴스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중 “마을이(정치인 방문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가난을) 파는 것처럼 보여요”라는 말은 핵심을 간파한 말이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주민은 “평소에는 정치인들이 서민들에게 무관심하고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다가, 명절이나 선거 직전 달동네나 재래시장에 들르는 건 생색내기로 보인다. 살기 좋은 마을인데 언론 보도를 통해 마을이 가난하게만 보도되는 것이 싫다”고 말했다.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중요한게 아니다. 달동네 주민은 왜 명절과 같은 때만 정치인들의 ‘조연’으로만 머물러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물음이다.

[미디어스] YTN 사영화는 민주주의·법치 짓밟는 폭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 방통위 등을 앞세워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해 공영방송 시스템을 파괴해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를 대폭 감축한 데 이어 YTN에 대해서도 지배구조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연합 등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공영언론의 뉴스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집중지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정부가 국가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의 정파적 미디어 정책에 매몰되어 국제 정세에 눈을 감으면서 국가 미디어 경쟁력을 약화시킨 우를 범한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가동하는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우는 것도 심각하다. 글로벌 시대 국내 정보통신 기업의 보호, 발전을 위한 전략과 비전 제시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방송통신 정책 관장 기관의 수장을 검사 출신으로 앉힌 것은 가히 국제적 코미디라 할 수 있다. KBS에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이 벼락치기로 짝퉁이하듯 인사조치를 한 것 역시 민주주의, 법치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공영, 공공언론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급증한 허위보도에 대처할 언론 시스템의 하나로 그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를 물려주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허위보도는 정치적, 경제적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전문가도 식별이 쉽지 않아 시민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등은 허위보도에 대한 대처는 언론의 자율적 대처가 최선이라고 결론 내리고 이를 위해 공영언론 육성, 언론사 지원 등의 방식을 강화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언론사의 정당한 사실 확인 요청에 귀를 막은 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해왔으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엔 언론 탓이라는 식의 주장을 앞세웠다. 이런 모습은 박정희 정권 이래 정치권력의 언론탄압이 그 방식을 달리할 뿐 내용면에서 유사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결과적으로 언론자유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상식에 정면 위배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폄훼하면서 대중매체를 적대시해왔다. 이런 행태는 소수 언론보도를 구실로 삼아 이뤄지고 있지만 소뿔을 고친다며 소를 잡아 죽이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피했어야 할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방송계를 초토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와 그 추종자들은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로 공격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지만, 가짜뉴스의 속성을 살필 때 개념 규정이 모호하며 따라서 전 세계가 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EU는 가짜뉴스 대신 ‘조작된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했고, 영국 정부도 공식 석상에서 ‘가짜뉴스(fake news)’라는 표현 대신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혹은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공공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가짜뉴스는 미국식 표현인 ‘Fake News’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조작뉴스(fabricated news)’ 또는 ‘허위정보(false information)’로 불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짜뉴스는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disinformation)’이다. 언론사의 ‘오보(misinformation)’의 경우 일부러 거짓정보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지는 않았다면 가짜뉴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처럼 정권 차원에서 그 대책에 올인하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민주주의와 법치, 원칙’ 주장이 얼마나 해괴한 것인가가 저열한 방송 대책에서 거듭 드러나고 있다.

->민중의 언어는 절대 못 바뀌

바꾸려는 시도가 지식인의 오만. 민중들도 ‘가짜뉴스’가 오보라고 다르다는 걸 알아.

오보는 정정하면 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게 문제. 학자들은 용어 정리하다가 세월 다 보내

[민들레] 의사들의 '계급 폐쇄 전략' 뚝을 준비는 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는 그동안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주로 기득권 세력의 편을 드는 정책들, 예를 들면 감세정책, 간호사법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일관했으나 이번에는 의사들의 이해보다는 국민 다수에게 매우 절실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좋게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도저히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선거용으로 꺼낸 카드의 의혹도 짙다. 충분한 논의 없이 '필수의료 패키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그리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러 의사단체들도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과에 쏠림현상이 문제라고 반발

의사들은 갑자기 의대 입학생이 늘어나면 의학교육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대입에서 의대 쏠림이 심화되어 이공계 붕괴 등이 예상되고,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비 상승 등 국민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의대 증원과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 그리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3.9%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했다"며 "의협의 거부는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면허취소까지 강행하겠다고 한다. 문제인 정부가 칼을 들었다가 실패한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완수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문제는 이해집단의 반발에 공권력을 단호하게 집행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헤게모니 능력과 대국민 설득력에 달려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의 부족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닐 수 있고, 의사 수의 증대가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부안의 성공 여부는 정부가 현재와 미래의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증대되는 의료비 부담과 의료 전달체계 문제의 종합적 재조정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 문제인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안과 의대정원 증원안이 의사들의 저항으로 좌초한 것도 공권력을 단호하게 집행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기보다는 정부나 민주당의 종합적이고 거시 정책적 비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전면 반대 아닌 부작용 내세우는 의사들 전략

-> 유리바닥

시장에서 독점적 이익을 누리려는 전문직이 자격증 소지자의 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전략은 거의 상수에 가깝다. 흔히 '계급 폐쇄(class closure) 전략'으로 불리는 이 의사들의 행동은 전문직 자격자 수가 늘어나거나,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한 영역에 들어오면 자신이 차지할 파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서 자격증 소지자 수를 줄이거나, 자신의 권한 영역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의협이 의대 증원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확대하는 간호법에 대해 반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 1990년대에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증대하려 했을 때 인권 변호사들까지 시민단체에서 탈퇴하거나 2000년 의약분업 의제로 인의협 의사들이 여러 사회단체에서 대거 탈퇴한 일도 그런 예에 속한다.

이들은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히 큰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 조치를 전면 반대한다고 말하면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개혁은 그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반박하거나, 전문직의 규모가 커지면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은근히 위협한다. 이번 정원 증원안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같은 논리를 동원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와 수도권 유인의 강력한 요인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의대 증원을 하면 지방 의대에 진학한 사람들은 대다수 수도권으로 갈 것이며, 필수의료 분야보다는 돈되는 성형외과 피부과 쪽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증원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하면서 사실상 모든 시도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것인가? 의협의 의대정원 증원 반대 논리에는 의사 기득권 지키기 전략과 합리적 비판의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경제학자 허쉬만 (Hirshman)이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개혁안이 나왔을 때 기득권 집단은 그 부작용과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들먹이며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 영국의 보수주의자 버크 이래의 모든 기득권 세력의 일관된 전략이다.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 아버지. 저러지 않았는데
정치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진보&보수 (건국전쟁, 애국 등 주제 공부하기)

부작용·혼란 주장 잠재울 종합적 정책 제시 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의사들의 일관된 증원 반대 논리에는 왜 전국 자연계 최우수 학생들이 모두 의대로 몰려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대답은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 최우수 성적을 자랑하는 학생들이 모두 의대로 진학하는 문제와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이 왔을 때 국가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도 없다. 즉 의료행위가 이렇게 영리행위로만 일관하고,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10%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아직 6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 없는 서민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야 하는 현실에 대한 의료인으로서 윤리적 고민도 찾아보기 어렵다.

개혁의 부작용, 의도하지 않는 결과, 더 큰 혼란과 비용지출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증원 자체를 반대하려는 집단 저항에 맞서서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투입되어야 하는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분명한 제도개혁과 효과적인 재정 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실상 증원을 무산시키려는 의사 집단 내 여론을 소수화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회경제개혁이 O, X로 답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모든 정책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대체로 실패한다. 즉 필수의료 종사자 우대, 의료 영리화 축소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지방의 공공병원 육성 정책도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의협의 반발에 수긍할 수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나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의지나 정책시행 방법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국민 건강권 확대에 도움이 되는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공공병원 증설 의지가 없고, 의료 시장화와 영리 병원 도입을 '개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이 구조적이고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는 고작 하나의 처방일 뿐이다. 그것과 연관된 구조, 제도, 의식 개혁의 고차방정식을 동시에 풀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의사들과 타협하여 의료수가 대폭 인상을 약속해서 그 부담을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할 위험성도 있고, 대형병원과 타협해서 의료 영리화를 서두를 수도 있다. 그 경우 국민들에게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책,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확보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 의료 시장화를 막는 정책도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펼 것 같지 않다.

->현장테스트에서도 나올 가능성 높아.

Q:이번에 의대 정원 통과될 것 같니?

A:윤석열은 밀어붙이는 경향 있잖아(정답)

A2:여론 어느정도 형성됨

->policy mix 떨어져. 관련 다른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증원한다.

최고의 포퓰리스트인 윤석열. 반발하면 더 밀고가는 기질이 있음.

무지막지하게 통과시키려고 할 걸? 노상 내세우는 게 반문재인인데.

윤석열 심리: 문재인 실패했는데 나는 성공했지롱

역행하면서 이거 하나만은 끝가지.

의료민영화하면서 의사 수 늘려?

의사들 피 볼 듯

피 봐야 시원해 하는 사람 심리

총선에서 결정 영향 미칠

의대 정원 문제는 국가 미래 걸린 복합적 의제의 하나

사실 국제기준으로 보면 한국 의료제도는 비교적 양호하다. 국민 보편적 건강보험이 도입되어 있고,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수준은 매우 낮고, 가족 중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가정 경제는 거의 파괴된다. 지금 의협이 아무리 진료 거부를 하겠다고 하고, 전공의들이 면허증까지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모든 이과 최우수 학생들이 의대로 몰려가는 이유는 한국에서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 수준이 매우 높고, 이 불안한 노동시장 조건에서 그래도 의사들이 높은 보수와 안정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수의 부족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나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과계 최우수학생 의대 쏠림이 사실 더 심각한 현상이고, 국가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는 R&D 예산 대거 축소 정책에서 보듯이 과학 기술을 선도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육성책은 거의 하나도 제출한 것이 없다. 의대 진학을 촉진하는 요인을 오히려 더 추가했다. 의대 진학은 누가 뭐래도 사적인 동기에서 움직이고, 교육 이후의 수입이나 성과도 사적으로 전유되지만, 순수 과학이나 첨단 과학 분야 전공은 그 자체가 공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려를 찾아보기 어렵다.

냉정하게 말해서 의사 수가 늘어나 모든 사람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보다는 아픈 사람 자체가 줄어들어 병원 갈 일이 없어지고, 의사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더 좋다. 판검사나 변호사 수가 늘어나 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잘 받는 세상보다는 아예 소송 자체가 줄어들어 판검사나 변호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더욱 좋다. 물론 이것은 이상일 따름이고, 우선은 의료행위가 병원과 의사들의 돈벌이가 되지 않도록 하고, 판검사 지위가 권력과 돈을 얻는 중간 다리가 되는 이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병원과 법원, 의사와 판검사는 위급한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고, 부정의를 바로잡아 원한과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극히 중요한 기관이자 요원이지만, 이들의 활동은 치료나 분쟁 해결 등 원상회복이 목표이지 미래의 먹거리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기후 위기와 이후 팬데믹 가능성, 저출생과 노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N수생이 독차지하는 의대 입학생,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한꺼번에 고민해야 국가가 정말로 필요한 의사의 규모와 그들의 질을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대 증원 문제는 단순한 의료정책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정치적 의제이며, 국가의 미래 인재 양성과 인력 재배치, 공공복지, 국가 재정,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연관된 복합적 의제다. 이익집단의 저항에 국가가 굴복하지 않으려면 정당의 정치력과 정책 능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판단력과 참여 모두가 필요하다.

조국 2심 판결이 '공정 기준 세웠다'는 한겨레·경향

-> <연속성과 교차성>저자가 쓴 기사
이 사람이 쓴 것 다 읽어보는 거 추천!
민들레 필진 중에 제일 낫다!

검찰주의자들. 법조언론인클럽에 한겨레도 아무 생각 없이 편입
검언유착에 따른 결과물
안 그러면 특종 못하잖아
검사들은 이용가치가 있지. 조중동보다 한겨레에 흘리는 게 더 효과 있잖니?
기득권에 편입돼서 기득권을 누리는 상황
진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회에서는 불편하고 어려워.
그러니까 서서히 침몰

“조국 사태는 교육·입시와 관련한 공정성·정직성의 문제를 뜨거운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이제 형사처벌을 통해 확인된 엄격한 잣대를 세우게 됐다.”(한겨레)

“조 전 장관은 이 단죄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이번 재판이 환기시킨 대로 한국 사회의 공정 기준을 바로 세우는 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경향신문)

하지만 한겨레와 경향 스스로도 이 말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고등학생 인턴증명서를 사실보다 조금 부풀려서 작성했다고, 자녀의 온라인 쪽지 퀴즈를 도왔다고, 공무원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실형을 판결받는 학부모는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을 보고도 ‘편법과 특권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사법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은 명백하다.

하지만 족벌언론들은 당연하거니와 소위 ‘진보’언론들까지 기다렸다는 듯 이 황당한 판결에 호응하면서 조 전 장관에게 다시 돌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9년부터 시작된 전 사회적 마녀사냥의 효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5년 동안 검찰과 족벌언론들은 서로 긴밀히 협력해서 전무후무한 규모의 질과 양으로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을 공격해 왔다.

그리고 한겨레와 경향도 이런 마녀사냥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뒤를 쫓아 왔다. 따라서 이 언론들에는 자신들의 지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 근거가 보잘것없으면 뒤늦게라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녀사냥에서 발을 빼는 게 맞겠지만, 거꾸로 끝없이 ‘그럴 만했고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뭔가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조국포비아’가 만들어진 출발점인 2019년 검찰-언론의 연성쿠데타(‘조국 사태’)로 돌아가서 지난 5년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게 된 핵심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극의 뿌리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추구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데 있었다.

일제 식민 시대에 뿌리를 둔 한국 국가기구에서 검찰의 지위는 특별하다. 특히 검찰은 1987년 이후 군부나 안기부(국정원)가 차지하던 자리를 이어받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을 무기로 철옹성 같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었고, 또 다른 선출되지 않는 진정한 권력자들(재벌총수, 언론사주 등)과 학맥, 인맥, 혼맥으로 엮이며 기득권 카르텔의 보루가 돼 왔다.

이런 검찰이 스스로 저질렀거나 연루된 죄과들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삼성 X파일,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탄압, 용산참사 진상 은폐, BBK 무혐의, 김학의 사건 은폐, 한명숙 사건 조작, 유우성 간첩 조작,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등 끝이 없을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90%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반면 고소당한 검사 중에 기소되는 비율이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막강한 특권도 누렸다.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돼 온 ‘검찰개혁’ 요구와 열망을 낳았다. 그러나 검찰은 언제나 위기가 닥치면 ‘권력의 더러운 오물을 처리하는 하수인’에서 ‘권력의 부정을 척결하는 정의로운 칼잡이’로 변신했다. 2016년 촛불로 닥친 구체제 청산의 위기 앞에서도 검찰은 또다시 ‘카

멜레온 같은 분장술'을 펼쳤다.

구체제의 일부를 꼬리 자르는 과정에 앞장서면서 스스로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사들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나마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자 이들은 또다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구호를 내걸고 반격을 시작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를 겨냥한 마녀사냥의 출발이었다.

'사모펀드', '관급공사', '권력형 비리', '대선자금 조성', '웅동학원 사학 비리'에 대한 무수한 '카더라'들이 쏟아졌고 검찰의 모든 자원과 인력이 여기로 돌려졌다. 그러면서 이미 그때부터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삼성 이재용에 대한 수사, 계엄문건 수사 등은 뒤로 미뤄지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 조국 일가 마녀사냥의 핵심에는 사모펀드가 있었다.

이것은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인 '조국 가족 펀드'이며, '신종 정경유착'이자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초기에 검찰과 언론의 주장이었다. 특수통 검사 70여 명과 수사관까지 총인원 100여 명이 투입돼 70여 군대를 압수수색하고 조국, 부인, 동생, 딸, 아들, 모친, 친척들까지 확대돼 나갔다. 심지어 사망한 부친과 동생의 이혼한 전처까지 불러 나왔다.

검찰은 조국 부부의 PC를 압수해서 거기 담긴 모든 정보를 털었고, 부인과 딸의 일기장도 압수해 갔고, 부부와 가족 간의 사적인 문자메시지와 대화 녹음까지도 모두 들춰보고 언론에 흘렸다. 검찰뿐 아니라 언론과 일부 지식인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조국 가족을 물어뜯었다. 2019년 그 절정기에는 하루에도 수천 건의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우파 정치인과 논객들만이 아니라 진중권, 김경율, 권경애, 서민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조국 교수와 그 가족에게 혐오와 적의까지 느껴지는 낙인을 찍었다. "위선", "사기", "구역질" 등의 날 선 언어들 사용됐다. 서민 교수는 조국 후보자를 "기생충", "말라리아와 동급"이라고 했다.

이연주 전 검사는 당시 벌어진 '조국몰이'를 이렇게 묘사한다. "검사들은 빠르고 무섭고 잔인했습니다. 굶주린 짐승보다 더 포악하게 한 가족을 향해 달려들어 물어뜯었습니다. 언론과 현란한 호흡을 맞추며 빈사에 놓인 그 가족을 베고 또 베고 또다시 베었으며, 그들이 머문 자리를 구석구석 뒤져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특수부 정치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특수수사 기법은 '가족인질극'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더 견디기 어려운 법이라는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조국 가족이 당한 인권 유린, 사생활 침해, 혐오, 낙인, 편견, 조롱, 따돌림, 스토킹, 조리돌림, 집단적 괴롭힘은 실로 역사에 남을 수준과 규모였다.

조국 가족 구성원 중에서 어머니는 건강을 잃고 감옥에 갇혔고, 아버지는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잃었으며, 그 자녀들은 청춘을 바쳐 이루어 온 경력과 학력이 인생에서 지워져 버렸다. 조 전 장관은 이 경험과 고통의 기억을 나중에 쓴 책과 글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나와 내 가족은 괴물로 낙인찍힌 후 발가벗겨진 채 조리돌림을 받고 멍석말이를 당했다. ... 매일매일 또 무슨 기사가 실리는지 아침부터 밤까지 걱정해야 했다. 기사 하나하나가 몸에 박히는 표창같았다.” “수십 개의 칼날이 몸속으로 계속 쑤시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가족의 삶과 뼈가 베이고 끓기고 피가 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아야 하는 끔찍한 절통(切痛)이었다.” <조국의 시간>

“2019년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나의 온 가족은 무간지옥(無地獄)으로 들어갔다. ... 배우자와 동생은 감옥에 갇혔다. 이 충격으로 팔손 노모는 멀쩡했던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 한쪽 눈을 실명했다. 배우자는 구속수감 중 수시로 병원 신세를 지며 진료를 받고 있다. 동생은 검찰 수사, 구속, 석방 등을 겪으면서 생이빨 7개가 빠져 임플란트를 해야 했다.” <그대가 조국 스토리북>

특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겪은 고통은 끔찍했다. 원래 젊은 시절에 겪은 사고의 후유증이 있었던 정경심 교수는 끝없는 수사, 재판과 수감생활 속에 몸과 마음이 너털너털 해졌다. 하지마비 증상까지 나타나 전신마취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재활치료도 못하고 1152일을 감옥에 갇혀 있었다. 지난해 감옥에 있던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고 돌아온 임성배 교수 부부가 SNS에 올렸던 글은 처참한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오는 정경심 교수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 정경심 교수의 모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야위었습니다. ... 하지가 마비가 되고 다리 힘을 잃어 걷지를 못해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 (정경심 교수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아내는 참았던 눈물을 펄펄 쏟아내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검찰과 언론이 조국 가족에게 제기한 혐의들 중 대부분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특히 사모펀드, 대선자금 조성 등은 하나도 입증되지 못했다. 이 혐의들은 이미 조국 교수의 5촌 동생인 조범동의 1심, 2심, 대법원 판결 모두에서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 실소유주도, 정경유착도, 공모도, 권력형 비리도 없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이것은 다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때는 이 혐의들을 넣지도 못했다. 결국 ‘유죄’로 남은 것은 고작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함께 ‘봉사활동 표창장’과 ‘인턴활동 증명서’, 온라인 쪽지시험 조작 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검찰이 위법수집 증거를 이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했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거래하거나 증인들을 압박해 원하는 판결을 받아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국 가족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거듭해서 사과하고 반성해 왔다. “흠수저 청년들에게 ...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를 비난해주십시오.”(조국) “저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왔다는 반성입니다” (정경심),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조민)

우리 사회의 다수는 이 마녀사냥에 침묵했고, 희생자들의 고통에서 등을 돌렸다. 차별과 혐오

에 반대해서 인권을 말하던 진보진영 사람들까지 방관하거나 침묵했고, 심지어 급진좌파들까지 검언 카르텔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며 공격에 가담했다. 이것이 바로 마녀사냥의 효과였다. 거대한 낙인찍기 속에 편견이 부추겨지면서 혐오의 감정은 쉽게 전염됐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립의 압박을 느껴서 침묵하게 됐다.

그렇수록 편견이 더욱 강화되면서 사람들은 공격받는 희생자의 고통에 둔감해졌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마녀사냥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2019년 가을 서초동 네거리를 꽉 채웠던 거대한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있었다.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흐름이 거리에서 폭발했다. 연인원 수백만 명이 함께한 그 시위는 명백히 2016년 촛불항쟁의 연장이면서, 한 단계 발전이었다.

단지 한 사람의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넘어서,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2016년 촛불항쟁과 달리 주류언론, 정치권, 시민사회 진영, 진보좌파 단체들, 지식인들 거의 대부분이 못 본 척하며 등을 돌린 가운데도 주로 조직되지 않은 대중 스스로의 자발적 힘으로 그러한 운동이 등장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정치적 혼란과 이질적 요소도 섞여 있었지만 운동의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마녀사냥 희생자들의 고통에 공감했고, 자기 일처럼 같이 아파했다. 조 전 장관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내 한계와 불찰을 알면서도 곁에 있어 주고 우산을 씌워준 이들은 기득권층이 아니라 일면식도 없었던 보통 사람들이었기에 더 감동이었다”고 돌아봤다.

물론 이 운동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9년에 결국 조국 법무장관은 취임 한 달 만에 사퇴했다. 이후에도 검찰-언론 카르텔의 마녀사냥은 윤미향, 추미애, 이재명으로 표적을 바꾸어가면서 이어졌다. 기득권 카르텔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마녀사냥에서 표적이 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불러 나오는 가족인질극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검찰개혁 촛불시위는 아무 성과 없이 꺼져버린 불꽃은 아니다.

이 운동은 검찰-언론 카르텔의 뜻대로만 모든 것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었고, 무엇보다 검찰-언론을 지독하게 불신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지난 대선 직후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국회에서 최초로 검사 탄핵안이 통과된 것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구속 시도가 실패한 것도, 윤석열 신검부 정권이 조기 레임덕에 빠진 것도 이런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개혁과 진보를 주장하던 정치인과 정치세력들이, ‘진보’ 언론이, 지식인들이 이 목소리를 대변하고 뒷받침하려 했다면 더 많은 성과가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조 전 장관이 공지에 몰렸을 때 사퇴를 압박하던 청와대 인사와 민주당 중진들이 있었고, 윤미향 의원이 마녀사냥당할 때 ‘손절’하고 당에서 내쫓던 민주당 이낙연 지도부가 있었다. 족벌언론에 나가서 마녀사냥에 힘을 보태던 ‘진보’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있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과 언론의 공격을 당할 때 ‘추윤갈등’이라고 몰타기 하며 같이 돌을 던지던 정치인들이 있었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며 검찰을 돕던 민주당과 진보정당 정치인

들이 있었고, 검찰 정권의 품으로 날아가 버린 조정훈 의원 같은 이들이 있었고, 국민의힘과 손잡고 선거제를 되돌리고 이재명을 2선 후퇴시키며 '강성진보 반기업 이미지를 벗어나자'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이들이 있었다.

이것은 천만 명이 넘게 본 영화 <서울의봄>에서 전두광과 하나회보다 더 우리를 더 답답하고 분노하게 한 것이 이태신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육군본부에 궁둥이를 붙이고 앉아서 어정쩡한 태도로 시간이나 끌고 하나회와 타협을 모색하며 발목이나 잡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뒤통수를 치던 무능하고 기회주의적인 국방장관과 '똥별'들이었음을 떠오르게 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누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역주행에 맞서서 일관되게 싸울 수 있는 믿을만한 인물이고 세력인가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여기에 있다. 과연 지난 5년 동안 누가 가장 앞장서서 이러한 마녀사냥에 반대해서 희생자들의 편에 섰는가? 검찰과 언론의 눈치를 보며 그 힘에 굴복하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 공격을 받으면서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보적 개혁들을 추진하려는 진짜 의지를 보인 것은 누구였는가?

끝내 이준석과 손잡은 이낙연...정체 모를 합당, 결과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원칙과상식' '새로운선택' 등 이른바 제3지대의 4개 정치세력이 합쳐 단일 정당으로 4월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출신들을 비롯해 정치공학적 타산 외에는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설 연휴 첫날 전격적으로 합당 선언을 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야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정체성과 해계모니를 놓고 여러 갈등을 빚다 뛰쳐나온 소수 이탈파가 주축인 탓에 정치 결사체로서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성원들의 지지 기반과 이념이 워낙 제각각인데다 종전까지 이렇다 할 인적 교류나 공조 활동을 축적해온 바도 없어 상호 연대의식이 허약할 수밖에 없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단일 정당을 급조한 상태라 앞으로 당헌·당규 및 공약 수립,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각 정파의 노선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는 산적한 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파열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민주당 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이낙연 공동대표의 변신은 여러모로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노무현의 정신과 가치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탈당했던 그가 결국 수구보수 세력의 본산인 국민의힘 대표였으며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진력했던 이준석 대표와 손을 맞잡은 것은 극도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낙연 대표는 여성과 장애인·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세대 갈라치기 수법으로도 악명 높은 이준석 대표로부터 그간 "저라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 "빅텐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지향점을 공유하지 못했다" "무임승차는 곤란하다" "윤핵관 같다" 등 온갖 수모

를 당하면서도 "함께 하자"고 사정하다시피 해 지지층까지 아연실색케 했다.

이번 합당의 최대 걸림돌은 당명 결정이었는데, 이마저도 이낙연 대표가 뒤로 물러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명칭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욱 의원은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당명에 대해 결정을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다"며 "김종민 공동대표가 1차적인 결단을 하고, 이낙연 공동대표와 통화하면서 설 전에 합당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보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계속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합 협상의 맨 마지막 문제는 당명이었다. 저희가 써 왔던 '새로운미래'라는 이름에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깊은 애착을 갖게 됐고 저 또한 그 이름이 좋았다"면서 "그러나 당명 줄다리기로 설 연휴를 보내면 신당 전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당명을 적당한 조합이나 새로운 작명이 아니라 100% 이준석 대표 뜻대로 따라갔다는 것은 이낙연 대표 측이 얼마나 끌려다니는 형국인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통합은 이낙연 전 총리님의 큰 결단으로 많은 쟁점이 해소됐다.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간략하게 언급했다.

'민주당의 적자'로 불리던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당론이었던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하는가 하면 경선 패배로 공천을 못 받고 탈당한 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나, 삼성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검찰개혁 법안엔 반대하다 자신의 사촌동생이기도 한 특별보좌관의 성폭행 사건 여파로 제명 처분을 받자 자진 탈당한 양향자 의원과 의기투합한 것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 출신으로 민주당에서도 중도우파적인 구주류를 대표하던 그가 끝내 진보적 개혁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엘리트 기득권으로서 보수화한 것은 예견된 퇴행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많다.

그간의 정치적 궤적이 천차만별인 이들이 일단 물리적 결합을 통해 통합신당을 탄생시키기로 합의는 했으나 실제 총선에서 어느 정도 존재감을 보일지 결과를 낙관하기는 아직 어렵다. 제3지대 신당의 성공 모델처럼 거론되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과는 달리 현재 개혁신당은 호남과 같은 탄탄한 지역적 기반도 없고 지지율 선두권의 스타급 대권주자도 안 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여야 두 거대 정당으로 양극화한 정치 지형과 진영간 총결집 양상이 더욱 심화해 신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 자체가 협소한 실정이다.

개혁신당은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후보도 최대한 많이 출마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까지 나온 여론조사상으로는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한국갤럽의 2월 1주 차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각각 3%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에서도 개혁신당은 4%, 새로운미래는 3%에 머물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창당 직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7~11%를 얻었던 것과 비교해 "신당의 컨벤션 효과가 끝났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통합신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15~20%대의 무당층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거대 양당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몇백 표 차이로도 승부가 갈릴 수 있는 수도권 등 박빙 지역구에서 통합신당 후보가 민주당 및 국민의힘 후보의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민주당은 8일 통합비례정당 참여 대상인 진보 성향의 군소 야당과 시민단체에 '선거연합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제안 대상은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 원내 3개 정당과 시민사회 인사들 모임인 '연합정치시민회의'다.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2대 총선에서 민주개혁진보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세력의 연합으로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이 부여한 정치적 책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정책 중심의 공동 총선 공약 추진 ▲공정한 시스템을 통한 유능한 인재 선출 ▲'이기는 후보' 단일화 원칙의 지역구 연합 등을 3개 추진축으로 꼽았다.

선거연합 대상 가운데 새진보연합을 주도하는 용혜인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이낙연-이준석 통합신당 소식과 관련해 "전망과 비전 없는 양비론의 결말은 역시나 민주당 전 대표와 국민의힘 전 대표의 '합당 선언'으로 끝났다"며 "이런 걸 두고 선거공학적인 이합집산, 통합도 연합도 아닌 야합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건 개혁의 탈을 쓴 양비론이 아니다. 양비론에 근거해서 깃발만 띄우면 과거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했듯 내용 하나 없이 3자 구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땅따먹기 같은 논리가 정치의 발전이라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새진보연합은 어지러운 때일수록 중심을 잃지 않겠다. 설 연휴 직후부터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개혁과제 합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의대정원증원 반발

-노환규(전 의사협회 회장)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재앙이 시작됐다”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집단 진료 거부가 한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증원이 무산된 바 있다.

[경향] 의협, 15일 집단행동 돌입…정부 “징계” 강경 대응(1면)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며 “우리는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들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

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큰 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다. 앞서 2020년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는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물러섰다. 당시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미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 이미 파업 돌입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는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의협이 집단행동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설치했다. 복지부는 12일 중수본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비상진료와 응급의료 체계 운영 상황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타협 선 곳은 대통령실 “의사 집단행동 명분 없다”(6면)

대통령실은 12일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두고 “명분이 없는 게 아니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집단행동 초읽기에 들어간 의사단체와 타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뽕뽕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등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는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라며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 수술을 받지 못해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면서 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0년간 변호사가 10배 느는 동안 의사 수는 3배 늘어나 수요만큼 확충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생각은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하고, 정부는 최대한 (상황에 맞춰) 준비하고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60%'로 확대에... '어떻게 늘릴까' 고민(6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60%로 늘리기로 하면서 지방권 의대의 학생 선발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

[이범의 불편한 진실] 의대 정원, '줄빠가'에 맡길 것인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R&D 예산 삭감 등을
연상시킨다
이른바 사이다 정책으로
인기를 높이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자칫하면
사회적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과정을 봉쇄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의대 정원에 한정 말고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해봐야 한다

부디 공론화 장이 마련되고 이
과정에 의사들도
적극 참여하길 촉구한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들의 반응은 '팝콘각'이라는 게 주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정원을 늘리려다가 의사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어서 열받았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증원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니 팝콘이나 먹으며 재미있게 싸움구경을 하자는 것이다.

나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정책의 추진 방식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일단 증원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급작스럽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증원하려던 정원은 400명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하려는 정원은 2000명이다. 무려 다섯 배다.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갑자기 5058명으로 65%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린다 해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인구당 의사 숫자가 적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더더욱 모

자랄 것

정부는 지난해 전국 40개 의대에 정원을 얼마나 늘리기를 희망하는지 조사했다. 그리고 11월에 수요조사 결과 증원 요청분이 2151~2847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각 의대 입장에서는 다소 무리한 숫자를 답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의대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집계된 증원 요청분은 공교롭게도 정부가 정한 정원 규모 2000명과 근접해 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단번에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들을 꽤 씹하게 여기며 ‘팝콘각’을 즐기겠다는 심리가 일어나는 것은 십분 이해가 된다. 문재인 정부의 ‘온건한’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서 2020년에 일어났던 의사들의 반대운동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물론 이 투쟁에서 의사들은 승리했다. 코로나19 시기에 의료 공백에 따른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구제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들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었다. 게다가 성비위·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수술실 CCTV 논란 및 대리수술 사건 등이 이를 심화시켰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무려 89.3%나 된 것은 상당 부분 의사들의 자업자득이다.

‘종빠가’ 방치는 민주주의 좀먹어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놓은 캐치프레이즈는 ‘종빠가’ (좋아 빠르게 가)였다. 그런데 ‘좋아 빠르게 가’는 과연 좋은 것인가? 이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나 ‘수능 킬러문항 배제’, 그리고 지난 대선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해체’를 연상시킨다. 이른바 ‘사이다’ 정책을 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인기를 높이고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려는 태도가 엿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자칫하면 사회적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과정을 봉쇄해 버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 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의대 정원 확대에 한정하지 말고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는 두 차례 공론화를 경험했다. 하나는 2017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2018년 대입제도에 대한 것이었다. 수백명이 장기간 참여한 토론 끝에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건설하기로 했고, 대입제도는 비교과를 축소하고 정시 정원을 30%로 늘리기로 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토론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어느 집단도 결론에 대해 심각하게 반발하지 않았다.

내가 의대 증원을 공론화에 부치자는 것은 증원의 규모와 속도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증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러나 증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 주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주제는 이른바 ‘필수의료 기피’ 문제다. 지역적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의사제’(특정 지역에 10년간 의무 근무)를 추진하다 중단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기피현상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필수의료 영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해 문재인케어도 없앴 마당에 과연 건강보험 수가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비급여 진료 ‘밑 빠진 독’ 될 수도

의대 증원과 함께 공론화에 부쳐져야 하는 두 번째 주제는 ‘비급여 진료’ 문제다. 의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해왔는데, 최근 들어 인기가 한층 더 높아졌다. 그것은 의사 소득이 2010년대 이후 빠르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2014년 대비 2021년 의사들의 평균 소득이 단 7년 만에 55.5% 증가했다(치과의사·한 의사 포함). 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개원의(전문의) 평균 소득은 노동자 평균 소득의 6.8배로 회원국 가운데 1위다. 그렇다면 최근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의 이유는 무엇인가? 위 7년간 평균 국민소득의 증가는 22.0%에 불과하여, 55.5%에 달하는 의사들의 소득 증가를 절반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보다는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실손보험이 보편화되면서 비급여 진료를 손쉽게 권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이뤄지는 미용 목적의 시술이 의사들의 수입을 대폭 증가시킨 것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는 ‘밑 빠진 독’이 되어버릴 수 있다.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고 의사들이 피부과·성형외과로 빠져나가면 의대 증원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정부가 몇 가지 원론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보다 폭넓은 대중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시도되어야 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탈원전, 여성가족부, 국민연금 같은 문제들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예를 들면 최근 연금 전문가 세 명이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책을 냈다. 다소 암울해 보이는 제목과 달리, 가장 선명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재정을 지금부터 조기 투입하면 21세기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기금이 줄어들고 나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꼴이 되어, 많은 청년들이 우려하듯 미래 세대의 부담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얘기다. 충분히 공론화에 부쳐볼 가치가 있는 주장이다.

가득이나 불안한 세상이다. ‘팝콘각’에 빠져 ‘종빠가’를 방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태도는 불안을 키우고 민주주의를 쪼먹는다. 민주주의는 종종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국 사회를 결속시키고 사람들을 성장시킨다. 부디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고 이 과정에 의사들도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사설] 더는 참기 어려운 의사들의 집단행동, 명분도 실익도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전국 쫓기대회 개최를 예고했고, 1만여명 전공의 중 대다수가 설문 조사에서 집단행동에 찬성한다고 답한 상태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면허 취소'로 초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의 대치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까 우려

의료인력이 부족한 데다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까지 겹치면서 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체계는 기피현상이 만성화됐고, 지방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의료체계는 공동화에 빠졌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부가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0% 감축해 동결한 영향이 적지 않다. 의사를 찾아 '응급실 뽕뽕이'를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현장을 뵈는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직역이기 주의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의대 입학정원이 내년 입시부터 2000명, 2035년까지 총 1만명 증가하면 교육 부실로 '돌팔이 의사'만 양산될 것이라며 파업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한마디로 기우에 가깝다. 설령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조율해야지 환자를 볼모로 잡을 일은 아니다.

사태 흐름을 잘못 읽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명분도 실익도 못 챙길 것이다. 과거 경험에 취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부디 의사단체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만큼은 정부 방침에 협조하며 집단행동에 신중하길 바란다. 정부는 최대한 대화로 해법을 모색하며 의료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공의 '파업' 초읽기, 정부 '강경 대응' 배수진...폭풍 전야 의료계(1면)

의정 갈등'에 의료계는 폭풍 전야다.

26개 지방 의대 중 '지역인재 60% 이상' 7개뿐, 전체 확대 시 합격선 출렁(10면)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와 함께 비수도권은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을 제시했는데, 현재 26개 지방 의대 중 이에 부합하는 곳은 7개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60% 이상을 강제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당장 올해 대학 입시부터 지방 의대 합격선 하락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사설] 의사들 집단행동 자제하고 정부도 설득에 최선 다하라

집단 휴진 등의 행동을 강행해서 환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그 비난은 오롯이 의료계가 감당해야 한다.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부와 협의하는 게 우선

의사단체들은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집단행동을 통해 저지한 바 있다. 그때의 '효능감'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낼 것으로 본다면 판단 착오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고 '면허 취소'까지 가는 초강경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과거보다 훨씬 높다. 의사들은 집단행동 카드를 내려놓고, 정부도 최대한 설득에 나서 '강대강' 대처 사태를 막아야 한다.

[동아]의사 집단행동 예고... 대통령실 "의대증원 돌이킬수 없어"(1면)

또 현재 전공의 상당수는 2020년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해 결국 정부 방침을 좌절시킨 걸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의대생들이었다. 당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의대생은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전공의는 "의대는 실습이 중요한 과인데 2000명이나 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나 강의를 할 교수가 부족해 함량 미달의 의료 인력이 현장에 나오면 기존 인력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의사도 고령화, 20대 비중 4.8%뿐... "2035년엔 의사 20%가 70대 이상"(2면)

청년 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면서 의료계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두고 '의사들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의사 12만5492명 가운데 20대 의사는 6008명으로 전체의 4.8%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20대 의사들

이 차지하던 비중(10.6%)을 감안하면 12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30대 의사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3.9%에서 24.2%로 9.7%포인트 감소했다. 40대 의사 비중도 31.5%에서 28.1%로 다소 줄었다.

반면 의사 중 고령자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다. 50대 의사 비중은 같은 기간 13.9%에서 23.8%로 9.9%포인트 늘었고, 60대 의사 비중은 5.5%에서 12.3%로 2배 이상이 됐다. 70대 이상 고령 의사 비중도 4.6%에서 6.8%로 1.5배가량이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세를 감안하면 2035년에는 7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율이 전체의 19.8%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명 중 2명의 의사가 70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사설]의사 파업 초읽기, 국민 건강 최우선 두고 극단 충돌 피하길

명분 약한 파업 대신 대폭 증원된 의대생들을 제대로 된 의사로 키워내는 데 전문성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정부도 교육의 질 하락을 방지할 대책으로 의사들을 설득하고, 의대 증원 정책이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쏠림 완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중앙]대통령실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어…의사들 단체행동 명분 없다”(6면)

[조선]의료계 파업 땀 대형병원 수술 줄줄이 연기(12면)

이들이 집단으로 연차를 쓰거나 사직서를 내는 방식 등으로 파업에 나설 경우, 당장 대형 병원에선 환자들의 진료·수술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신규 진료·입원은 어려워지고,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5대 병원 전공의 수만 해도 서울아산 522명, 서울대병원 506명, 세브란스 493명, 삼성서울 457명, 서울성모 333명 등 2311명에 이른다.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 환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에선 “겨우 잡은 수술 일정이 또 밀리면 어떡하느냐” “왜 우리 환자들이 볼모가 돼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개혁신당 빅 텐트

[경향]빅텐트 연자 정체성 시비…이준석 ‘3지대 통합’에 탈당 역풍(5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4개 정치세력이 설 연휴에 합당을 선언했다. 명절 밥상에 제3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빅텐트’ 아래로 뭉치는 승부수를 띄운 것

일부 지지자들은 ‘정체성이 사라졌다’며 탈당을 선언

이준석 대표는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12일 MBC 라디오에서 “당명이 개혁신당으로 결정되는 것은 개혁신당 중심으로의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세력이 합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여성 공무원 지원자 병역 의무화 등 기존 공약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9일 유튜브 ‘여의도재건축조합’ 채널에 출연해 “지역구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일 기호 확보”라며 “단일 기호도 받지 못하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자강론) 가기 어려웠다”고 했다.

지지층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제3지대 통합이 이뤄진 것은 각 세력의 커지는 위기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옛 개혁신당 내부에선 당초 15% 이상의 당 지지율을 확보하고,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합류시켜 독자생존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좀처럼 뜨지 않으면서 당 인사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졌다.

[한겨레]

개혁신당의 빅텐트가 20대 총선의 국민의당 돌풍 수준에 미치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다. 안철수(당시 국민의당 대표)의 국민의당은 지역구 25석과 비례 대표 13석 등 38석을 확보했다.

“위성정당 안 만든다”…개혁신당의 속내는? (3면)

개혁신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지역구 당선자를 대거 배출하기 어려워 위성정당 창당의 추가 실익이 적은 개혁신당이 ‘꼼수 거부’라는 명분을 챙기려는 전략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공멸 위기에 4개 세력 합당…무당층 얼마나 파고들지가 관건(3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에서 탈당한 4개 세력이 진통 끝에 ‘개혁신당’이라는 빅텐트 아래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

전격 합의에 이른 배경엔 ‘위기감’이 크게 작동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이대로라면 제3세력이라고 하는 모든 신당들이 함께 침몰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었다”고 전했다.

이질적인 정치 세력들이 모인 만큼 ‘갈등 관리’는 시너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사설] ‘빅 텐트’ 친 제3지대, 양당 정치 넘을 대안 보여줘야

외견상으로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3분할 구도가 펼쳐지게 됐다. 거대 양당은 “잡탕밥” “페미(니즘) 친문 좌파 정당이 됐다”(국민의힘), “탈당파가 이준석 대표에 흡수됐다”(민주당)며 견제에 나섰다. 주로 자기 지지층을 향해 개혁신당의 색깔이 모호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증오의 반사이익 정치로 귀결돼온 양당 정치 극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개혁신당이 제3의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이런 민심에 부응하는 새로우면서도 상식적인 비전과 행동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뎃부터 올린 개혁신당, '미풍'과 '돌풍' 판가름은 지금부터(4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와 경찰·소방 공무원 여성 병역 의무화 등 자칫 세대나 성별 간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이견 조율도 과제다

"정권심판론 나뉘어 부담" "유불리 달라"... 3지대 빅텐트 출범에 촉각 곤두세우는 거대 양당(4면)

[사설] 통합 개혁신당 출현... 양당 증오정치 경고음 현실화

국민적 기대가 크지만 앞길은 험준하다. 통합 개혁신당이 첫 회의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고무적이다. ‘뎃다방 꿈수 위성정당’으로 얼룩진 양당과의 차별화가 돋보여서다. 그러나 아직 반(反)윤석열·반이재명 외에 명확한 비전과 가치는 내놓지 않았다. 4개 세력의 이념 지형이 좌우를 아우르지만 그만큼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기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서로 다른 문제의 경우 ‘DJP연대’ 등 성공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과거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비교하더라도 잠재적 대권주자 보유 여부, 지역연고 등 조건이 완전히 취약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적대와 증오 정치의 해소를 절박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양당의 이전투구에 염증을 느끼는 중도층 존재감도 어느 때보다 뚜렷하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꾸준히 20%대를 기록 중이다. 물론 유권자들이 ‘원포인트 단일 신당’ 또는 ‘무지개 연대’를 대안으로 삼고 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거대 양당 역시 자신들의 구태가 계속될수록 국민 마음이 신당으로 향한다는 점을 비상한 각오로 경계하기 바란다.

[동아]총선 57일 앞, 8년만의 3자 구도 시동(1면)

개혁신당, 무당층-2030 기대 높지만... “구심점 없이 급조” 지적도

과거 총선에서도 제3지대 신당이 돌풍을 일으켜 3자 구도로 완주한 경우 원내 교섭단체 요건인 20석 이상을 확보했던 적이 있었다. 1992년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이 31석을, 1996년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50석을,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해 원내에 입성했다.

개혁신당이 과거 국민의당(호남)이나 자민련(충청)처럼 확고한 지역 기반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

이번에 개혁신당은 수도권 청년층을 중심으로 바람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통화에서 “이번 총선은 지역이 아닌 세대교체 구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위성정당 없다는 개혁신당, 비례용지 뒤편호 노려(3면)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위성정당 불가 입장을 선제적으로 띄워 “거대 양당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대 양당 심판론’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다.

[중앙][view] 제3지대 빅텐트, 무당층 대안될까…이낙연·이준석 ‘개혁신당’ 합당(1면)

지역정서가 강한 한국 정치에서 개혁신당의 지역 기반이 불분명한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역대 제3지대 정당의 총선 성공 사례를 봐도 분명한 지역 연고가 있었다.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어 원내 3당이 된 20대 총선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을 탈당한 박지원·정동영 전 의원 등 소위 ‘호남파’가 합류해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을 키운 게 효과를 발휘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50석을 얻은 당시 김종필 총재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은 충청 지역이 기반이었다.

개혁신당은 호남 정치를 대표하는 이낙연 대표와 수도권·영남에 지지기반이 있는 이준석 대표가 이끌지만, 오히려 두 사람의 이질감이 역(逆)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합당에 반발한 기존 개혁신당 당원은 탈당 러시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영남권 재선 의원은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낙연과 손잡은 이준석은 배신자로 보일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호남권 초선 의원도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이낙연 대표가 보수당 출신과 손잡은 것에 실망한 유권자가 많다”고 했다. 어느 한쪽 표를 안정적으로 얻기 어렵다는 얘기다.

[사설] ‘빅텐트’ 합의 제3지대, 새정치의 가능성 제시가 관건

그러나 제3지대의 앞날은 그리 녹록지 않다. 총선 시간표에 쫓겨 ‘뭉치고 보자’ 식으로 급조한 인상이 없지 않다. 세력 간 이념·정체성 차이가 분명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외교안보·경제·노동·젠더 정책 어느 것 하나 융합해낼 교집합이 잘 보이지 않는다. 리더십이나 지역적 기반도 확실히 않아 공천 과정에서 지분 다툼 같은 불협화음이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윤석열-반이재명’ 프레임에 기대 반사이익을 도모하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양산한 낡은 체제를 혁파하고 새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비전, 역량부터 먼저 보여줘야 한다. 현실적 계산이 깔렸겠지만, “위성정당 안 만든다”는 방침은 여야의 꿈수 정치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조선]제3지대 빅텐트… 4개 세력 합당(1면)

이번 합당으로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4명(이원욱·조응천·김종민·양향자)이 소속된 원내 4당이

됐다. 민주당·국민의힘에서 공천받지 못한 현역이 3명만 더 합류하면 녹색정의당(6석)을 제치고 기호 3번을 받는다. 녹색정의당은 현재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지역구 선거 연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녹색정의당이 민주당 주도 선거 연합체에 참여한다면 독자 정치 세력으로서의 의미가 약해진다.

[사설] 급하게 뭉친 제3지대 신당, 제각각 정책으로 국민 설득되겠나

문제는 이들의 합당이 공통의 정책이나 이념·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혁신당은 ‘반(反)윤석열’ ‘반(反)이재명’ 외에는 어떤 공통점도 찾기 힘들다. 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경제·복지 원칙 등에서 180도 다른 이들이 모인 것이어서 총선용으로 급조한 선거공학의 산물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초대 총리를 맡았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준석 대표는 서해 공무원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이라며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 평화”를 비판했지만 이낙연 대표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고 반발했다. 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절대다수 국민이 위안부 합의를 안 받아들인다”며 옹호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문 정부가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비판했다.

경제·복지 정책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국가 재정을 고려해가며 ‘공정한 경쟁’에 초점을 맞춰 기회의 평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출마 당시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큰 정부’에 초점을 뒀다.

20~30대 젊은 남성층을 주력 지지 기반으로 하는 이준석 대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제 폐지를 발표했지만,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4개 세력 중 일부는 ‘병역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만 다른 세력들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한다. 이처럼 다른 입장을 하나의 정책과 선거 공약으로 묶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 정치사에선 정강·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당하거나 해체된 정당이 많았다. 개혁신당이 총선용 급조 정당의 오명을 벗어나려면 각종 현안에 대해 조율된 입장과 명확한 정강·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

[조선] [김대중 칼럼]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 더 비판해야 하나?

‘보수(保守) 언론이 보수 정권을 더 날카롭게 비판해야.’ 지난 1월 말 조선일보 비평란에 실린 독자권익위원회의 기사 제목이다. 보수 언론의 시각으로 보수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좌파 언론의 비판보다 정부·여당에 보다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적(的)으로 말해서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다. 그 대상인 권력이 우파건 좌파건 상관

없고, 언론이 보수적이건 좌파적이건 상관없다. 언론의 존재 이유는 비판 기능이다.

돌이켜 보면 역사적 고비마다 정권, 특히 보수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크게 작동한 것은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보수·우파 언론이었다. 4·19(그때는 좌·우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때도 그랬고 5·18 때도 그랬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에도 조중동은 순기능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역사의 진행이었느냐는 것은 지금도 논쟁의 대상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 보수 언론이 주류(?)인 상황에서도 보수 정권의 대통령은 줄줄이 옥살이를 했고 문재인 정권이 태동했으며 지금도 압도적 의식을 가진 좌파 정당의 전횡과 그 수장(首長)의 건재를 목도하고 있다.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을 비판해서 결국 좌파 정권의 득세를 도와준 모양새일 뿐이다.

좌파 언론은 어땠는가? 좌파 언론은 좌우 구분 없이 공정했는가? 보수·우파 정권을 공격하는 데는 때로 '가짜 뉴스'를 동원할 정도로 매몰차고 공격적이었으면서 좌파 권력을 비판하는 데도 그렇게 엄중하게 임했는가? 한 대표적 좌파 언론은 문재인 정권 시절 한 사무관의 내부 고발 사건을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아 자체 노조에서 고발당한 적이 있다. 한 언론 담당 기사는 "좌파 언론이 좌파 권력을 비판한 것은 지난 십 수년간 본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비평가들도 보수 정권에 대한 보수 언론의 태도는 비판하고 나서면서 좌파 언론의 편파적 보도에는 입을 닫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 정권은 '동네북'인 셈이다. 좌파 언론에서 무차별한 공격과 선동성 비판을 당하면서 보수 언론의 협공도 받아야 하고 게다가 비평가 또는 관전자들의 비판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의 경직성을 본다. 대통령 부인이 그런 '선물'을, 친북 인사에게 맥락 없이 받았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도록 고집부린 대통령 측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집권 2년 차 윤 정권에 타격을 줄 만큼의 큰 정치적 사건인가? 미국 언론(CNN·뉴욕타임스 등)도 크게 다루고 있지만, 큰 맥락은 백을 받았다는 것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됐다는 점에 새삼 놀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쩌면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역(逆)으로 빚대는 것인지 모를 정도다.

4·10 총선거는 한국 정치 지형(地形)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좌·우 지평을 가름하는 선거에서 대통령 부인의 '선물 백'이 유권자들의 결정적 선택 자료가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판단 준거는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적 결정, 안보·국방의 방향 설정이고 국민의 경제적 삶이지 대통령 부인의 '백' 수수여서는 우리 수준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하는데 몰래카메라로 찍고 1년을 기다려 총선 전에 드러낼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인 좌파가 과연 '사과'로 넘어갈 것 같은가? 이 사건은 사과하면서부터 제2막으로 넘어갈 것이 뻔하다.

보수를 비판하는 것이 보수 언론이 좌파 언론과 다른 장점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실론에서 보수 언론이 대통령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인의 경솔함에 집착하는 것은 가치 전도적이다.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이건 좌파 권력이건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는 것-그것이 언론의 길이지만 또한 원론적(原論的)이기도 하다. 보수 언론의 행태가 앞으로 또 다른 5년을 좌우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보수니, 좌파니, 진보니 하는 것들 자체가 가치 지향적 개념이다. 가치를 잃으면 공정한 언론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새삼 되새기게 된다. 크게 보면 보수층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그린 영화 '건국전쟁'이 많은 국민의 관심 아래 상영 중이다. 모처럼 광의의 보수 언론이 작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디올백 사건'이 그 흐름을 막는 보(淤)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경향] [정동칼럼] 역겨운 것은 바퀴벌레가 아니다

+

연합뉴스TV '건국전쟁' 관람한 한동훈 "이승만 시대적 결단 곱씹어야"

건국절 관련 내용 정리해두기

->영화 본 사람들 평 읽어보고 이해하고 있어야 해
애국&건국 키워드 상반기까지는 이슈 가능성 높아

이승만 한미상호방위조약, 농지개혁 예로 든 한동훈
극단적인 반공국가로 가게 됨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혜택은 누가 누린 것인가?
지정학적으로 소련 남하 막는 한반도
전시작전권 아직도 남아 있어.
세계에서 자기 군대 자기가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 어딴어?
그게 덕이야?
방위비+국방비
거기에 대한 인식 전혀 없어

농지개혁: 이승만 정치적 기반은 (대한독립?)
한민당보다 더 진보 성향 강했던 곳
혼자서 안 되니까 합작한 것. 나중에 독재체제 구축하고 조봉암 처형함
그래놓고 농지개혁 지가 한 것처럼 하고
그거 합작한 건데
농지개혁 통과시킬 때만 하더라도 지지기반 넓히기 위해 필요했던 것
아무리 이념이 중요해도. 이승만이 죽인 사람이 백 만이 넘는다는데?

대중문화